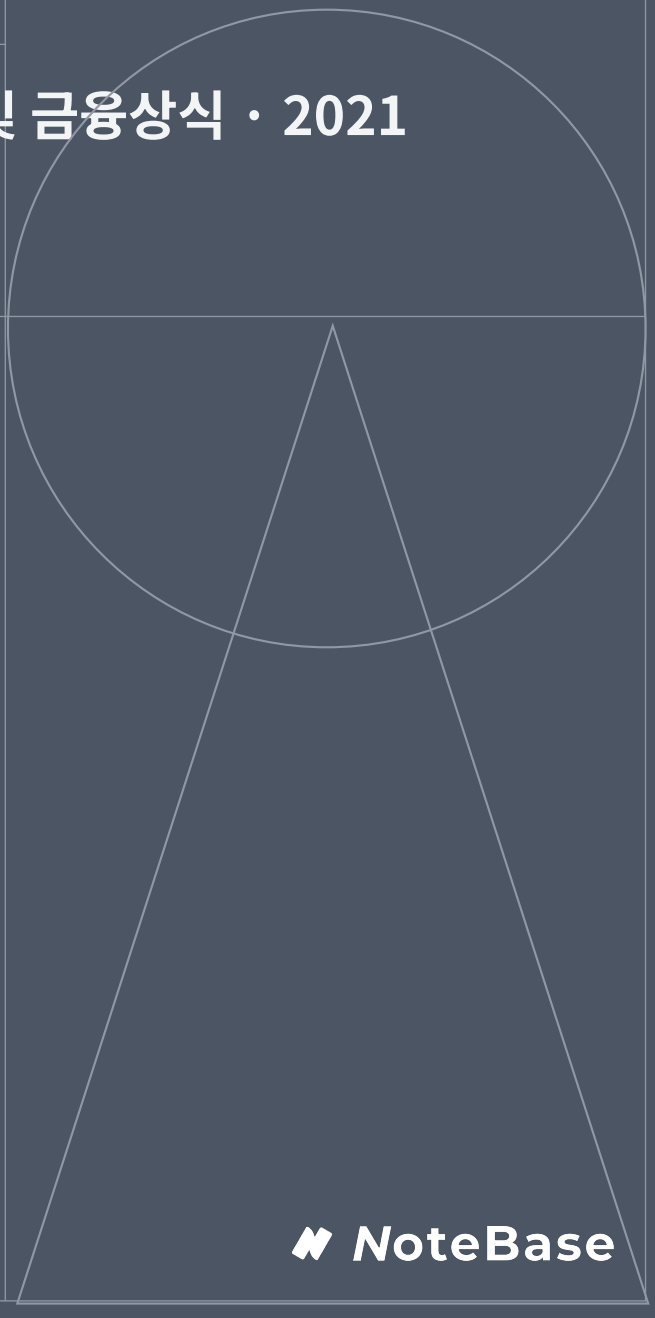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21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21

문 1.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수수료로 옳은 것은?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 취급제도

① 50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계약등기 부가서비스 중 수취인에게 서명·도장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 등이 지정한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회신우편의 취급수수료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신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수취인을 직접 만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도장 등 필요한 응답을 받은 뒤 이를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회신하는 계약등기 부가서비스이다. 회신우편의 취급수수료는 1통당 1,5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500원은 회신우편 취급수수료가 아니다. 틀린 금액 500원은 1,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000원은 회신우편 취급수수료가 아니다. 틀린 금액 1,000원은 1,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회신우편의 취급수수료는 1통당 1,500원이므로 옳다.
④ X — 2,000원은 회신우편 취급수수료가 아니다. 틀린 금액 2,000원은 1,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문의 긴 서비스 설명에 끌려 금액을 추측하면 500원이나 1,000원 같은 다른 부가서비스 수수료와 혼동하기 쉽다. ‘응답을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회신’이라는 문구로 회신우편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 설명에서 ‘수취인의 서명·도장 등 응답을 받아 발송인 측에 돌려보냄’을 확인하면 회신우편으로 판단하고, 그 취급수수료 1,500원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등기 회신우편은 응답 회신, 수수료는 1,500원이다.

NoteBase

문 2. 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민원우편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③ 민원우편은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부가취급 수수료)과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50g 규격요금+등기취급 수수료+익일특급 수수료)을 합하여 미리 받는다.

④ 착불배달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착불요금과 반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 가운데 특별송달, 민원우편, 착불배달의 취급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중량 산정, 전용 봉투 사용, 왕복 요금 선납, 반송 시 징수 항목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민원우편은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신청하고 발급된 서류를 회송받는 부가취급 서비스이다. 착불배달은 발송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이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특별송달에서는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도 우편물 무게에 합산한다.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발송용·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며, 발송과 회송에 필요한 취급요금을 접수할 때 함께 선납한다. 착불배달 우편물이 반송되면 발송인에게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62조·제64조와 우편업무 규정 제171조의3이 특별송달·민원우편·착불배달 반송의 기본 근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특별송달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도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틀린 표현: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된다.'

② X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인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틀린 표현: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표현: '취급용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③ O
민원우편은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과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을 합하여 접수 시 미리 받는다. 발송 요금은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로 구성되고, 회송 요금은 50*g* 규격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로 구성된다. 여기서 발송 시 부가취급수수료는 민원우편 취급수수료이며, 회송 시에는 익일특급수수료가 포함된다.

④ X
착불배달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면 발송인에게 징수하는 정확한 항목은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이다.
틀린 표현: '착불요금과 반송수수료'
올바른 표현: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

오답 포인트

③의 발송 시 '부가취급수수료'를 회송 시 '익일특급수수료'와 전혀 다른 항목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④의 일상적 표현인 '착불요금·반송수수료'를 공식 징수 항목인 '우편요금·반환취급수수료'와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송달은 통지서 중량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우편은 전용 봉투와 발송·회송 요금의 선납 여부를 확인한다. 착불배달 반송은 발송인이 내는 항목을 '우편요금과 반환취급수수료'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송달은 통지서 무게 합산, 민원우편은 전용 봉투·왕복요금 선납, 착불 반송은 우편요금·반환취급수수료이다.

NoteBase

문 3. 소포우편물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ㄱ. 감액대상은 창구접수 소포우편물(일반소포 및 등기소포)과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이다.
ㄴ. 우체국 창구접수의 경우, 인터넷우체국 사전접수를 통해 접수정보를 연계한 경우에만 감액대상이 된다.
ㄷ. 요금후납의 방법으로 우체국 창구에 100개 접수한 경우, 5%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ㄹ. 방문접수의 경우, 최소 3개 이상 발송하여야 개당 5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소포우편물 요금 감액의 대상, 창구접수 요건, 후납 물량별 감액률, 방문접수 감액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요금즉납은 접수할 때마다 요금을 내는 방식이고, 요금후납은 계약 고객이 일정 기간의 요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접수정보 사전연계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등의 접수정보를 접수 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요금 감액 기준상 창구접수 감액은 창구등기소포를 대상으로 하며, 고객이 주소록 등 접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방문접수는 고객이 직접 모바일 등으로 접수정보를 입력하고 사전결제와 보관장소 지정을 마치면 개당 500원이 감액된다.
ㄱ X: '일반소포 및 등기소포'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창구접수 중 등기소포와 방문접수 소포가 감액 대상이다.
ㄴ O: 창구접수 감액은 인터넷우체국 간편사전접수 등으로 접수정보를 사전에 연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ㄷ X: 요금후납으로 월 100개를 접수하면 5%가 아니라 10%가 감액된다.
ㄹ X: '최소 3개 이상'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접수정보 직접 입력, 사전결제, 보관장소 지정의 요건을 갖추면 수량과 관계없이 개당 500원이 감액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하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옳은 설명은 ㄴ 하나이므로 총 1개가 맞다.
② X: 옳은 설명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ㄱ·ㄷ·ㄹ은 각각 감액 대상, 감액률, 방문접수 수량 요건이 틀렸다.
③ X: 옳은 설명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ㄴ만 맞고 ㄱ·ㄷ·ㄹ은 틀렸다.
④ X: 네 설명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 ㄴ만 옳다. 올바른 개수는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일반소포까지 창구접수 감액 대상이라고 넓힌 표현, ㄷ에서는 후납 월 100개의 감액률을 5%로 낮춘 표현, ㄹ에서는 방문접수의 개당 500원 감액에 최소 3개라는 조건을 붙인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액 문제에서는 먼저 접수 방식이 창구접수인지 방문접수인지 나누고, 이어 대상 우편물, 사전정보 제공 요건, 즉납·후납 구분, 물량별 감액률을 각각 대조한다. 각 문장을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창구는 등기소포·정보 사전제공, 후납 월 100개는 10%, 방문 사전연계는 개당 500원이다.

NoteBase

문 4. 특급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ㄱ.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8시에 배달되었을 경우, 국내특급수수료를 지연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ㄴ. 국제특급(EMS)우편물은 당일특급에 준하여 배달처리한다.
ㄷ. 익일특급 취급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ㄹ. 당일특급우편물은 2회째부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특급우편물의 지연배달 배상, 국제특급(EMS)우편물의 배달 방식, 익일특급의 고시 주체, 당일특급의 재배달 방법을 구별하여 옳은 진술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국내특급수수료는 당일특급·익일특급과 같은 국내특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 우편요금에 더하여 내는 수수료이다. 지연배달 배상금은 약정된 송달기준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 지연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다.

핵심 구분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 다음 날 0시부터 20시 전까지 배달되면 국내특급수수료가 배상되고, 다음 날 20시 이후 배달되면 우편요금과 부가우편역무 수수료가 배상된다. 국제특급(EMS)우편물은 당일특급에 준하여 배달처리한다. 익일특급의 취급지역 관련 고시 주체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다. 당일특급 재배달은 2회째에는 가장 빠른 방법,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O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 다음 날 18시에 배달된 경우는 '다음 날 0시부터 20시 전까지'에 해당하므로 국내특급수수료를 지연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ㄴ O
국제특급(EMS)우편물은 긴급성이 높은 우편물로서 당일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한다.

③ ㄷ X
익일특급의 취급지역 관련 고시 주체를 우정사업본부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익일특급 취급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올바른 표현: 익일특급의 취급지역은 전국이며,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의 추가일수와 사유 등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한다.

④ ㄹ X
당일특급우편물을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하는 차수는 2회째가 아니라 3회째이다.
틀린 표현: 2회째부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한다.
올바른 표현: 2회째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재배달하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ㄴ으로 총 2개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다음 날 18시'를 보고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다음 날 20시 전까지의 지연배달에는 국내특급수수료가 배상된다. ㄷ은 고시 주체가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고, 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때가 2회째가 아니라 3회째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연배달 문항은 배달 시각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특급우편 문항은 배달 방식, 고시 주체, 재배달 차수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고, 옳은 진술만 센 뒤 보기의 개수와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당일특급 다음 날 20시 전은 특급수수료 배상, EMS는 당일특급 준용, 익일특급 고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재배달은 2회째 최선·3회째 통상이다.

NoteBase

문 5. 등기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도 정당 수령인이 될 수 있다.

②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③ 통화등기우편물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 금액을 표기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④ 물품등기우편물은 집배원이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의 이상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취급 우편물의 정당 수령인, 수령 확인 방법, 통화등기 및 물품등기의 배달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수령사실의 확인과 필요한 증명의 요구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당 수령인 = 우편물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수취인, 동거인·같은 직장 근무자 또는 법령이 인정한 대리 수령인을 말한다.
수령사실의 확인 = 등기우편물을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서명·날인 등으로 수령 사실을 남기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등기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에게서 수령사실을 확인받아 배달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배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우편법」 제33조에 따라 우편관서는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수령사실 확인은 원칙적인 절차이고, 증명 요구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추가 확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정당 수령인이 될 수 있다.

② X
등기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에게 수령사실을 확인받아 배달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수취인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등기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에게 수령사실을 확인받아 배달하며,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O
통화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실제 내용금액과 우편물에 표시된 금액을 서로 비교·확인한 뒤 배달한다.

④ O
물품등기우편물은 내용물을 열어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만 확인하게 한 뒤 배달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반드시'를 놓치기 쉽다. 등기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증명에 의한 신원 확인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통화등기는 내용금액까지 확인하지만 물품등기는 내용물이 아니라 봉투와 포장 상태만 확인한다는 차이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기 배달 선지에서는 먼저 '수령사실 확인'과 '신분 증명 요구'를 나누어 본다. 이어 보험등기의 종류를 확인하여 통화등기는 내용금액과 표기금액을 비교하고, 물품등기는 내용물을 열지 않은 채 외부 포장 상태만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등기는 수령 확인, 증명은 필요할 때만, 통화는 금액 대조, 물품은 포장 확인이다.

NoteBase

문 6. 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법」상 우편 관련 범죄의 행위 유형별 법정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취급 거부, 우편물 등의 개봉·훼손, 소인되지 않은 우표의 분리, 우편금지물품 발송에 적용되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인(消印) = 우표가 이미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표에 찍는 표시이다.
법정형 = 법률이 각 범죄에 대하여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취급 거부의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물 등 개봉·훼손의 죄의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인되지 않은 우표를 떼어낸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편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취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린 표현: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X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훼손·은닉·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경우의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틀린 표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O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소인되지 않은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④ X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린 표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각각 '1년·1천만원'과 '2년·2천만원'이 대응한다. ④에 몰수라는 맞는 효과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선지를 옳다고 판단하거나, ①의 징역형 상한이 맞다는 이유로 잘못된 벌금 상한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한 뒤 징역 상한, 벌금 상한, 몰수 여부를 각각 분리하여 대조한다. 선지의 일부 수치나 효과만 맞아도 나머지 하나가 틀리면 그 선지 전체는 X이다.

암기 포인트

취급 거부와 미소인 우표 분리는 '1년·1천만원', 금지물품 발송은 '2년·2천만원+몰수', 우편물 등의 개봉·훼손 기본형은 '3년·3천만원'이다.

NoteBase

문 7. 국제특급우편(EMS) 요금감액 대상 요건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가 1개월에 (㉠)만원을 초과하여 EMS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 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 적용한다.

	㉠	㉡
①	30	16
②	30	18
③	50	16
④	50	18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계약국제특급우편(EMS)의 요금감액 적용 요건과 지방우정청장 승인이 필요한 감액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계약국제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EMS이다.
요금감액 = 월간 이용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EMS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계약국제특급우편의 요금감액은 월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한다. 또한 18% 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따라서 ㉠은 50, ㉡은 18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월 이용금액 기준과 승인 대상 감액률을 모두 잘못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30만 원, 16% 이상
- 올바른 표현: 50만 원을 초과하고, 18% 이상 감액률인 경우이다.

② X
- 18% 이상이라는 승인 기준은 맞지만, 월 이용금액 기준을 30만 원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30만 원
- 올바른 표현: 50만 원을 초과하여 발송하는 경우이다.

③ X
- 월 50만 원 초과라는 적용 요건은 맞지만, 지방우정청장 승인이 필요한 감액률을 16% 이상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16% 이상
- 올바른 표현: 18% 이상 감액률이다.

④ O
- 월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요금감액을 적용하고, 18% 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하므로 두 수치가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요금표에 16% 감액 구간도 제시되므로 이를 승인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별도 승인 기준은 16%가 아니라 18% 이상이며, 계약국제특급우편의 감액 적용 문턱은 월 3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월 50만 원 초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국제특급우편의 감액 문제에서는 먼저 월 이용금액 문턱이 5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하고, 이어 지방우정청장 승인 기준이 18% 이상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 EMS 감액은 '50만 원 초과, 18% 이상 승인'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8.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물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

②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배달국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③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다.

④ 청구대상 우편물은 보통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의 청구권자, 청구 장소, 청구기한 및 대상 우편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분실과 파손에 따른 청구권자, 기산일, 기록취급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행방조사 청구 = 국제우편물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분실된 우편물은 발송인이 청구하고, 파손된 우편물은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며, 국제특급우편물은 4개월 이내이다. 청구 대상은 등기우편물·소포우편물·국제특급우편물 등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발송인만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파손된 경우와 달리 수취인까지 청구권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X
발송국가와 도착국가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배달국가)에서만'
올바른 표현: '발송국가와 도착국가(배달국가)는 물론 제3국에서도'

③ X
일반적인 6개월의 청구기한은 발송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제특급우편물은 4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도 있다.
틀린 표현: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올바른 표현: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④ X
행방조사 대상은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등 기록취급 우편물이며, 기록취급하지 않는 보통통상우편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보통통상우편물'
올바른 표현: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등 기록취급 우편물'

오답 포인트

②의 '에서만'과 ③의 '발송한 날부터'처럼 범위와 기산일을 바꾸는 표현이 함정이다. 또한 ④는 보통통상우편물과 기록취급 우편물을 섞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구권자는 사고 유형별로 분실은 발송인, 파손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나눈다. 장소는 제3국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발송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대상은 기록취급 우편물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분실은 발송인, 파손은 양쪽, 장소는 제3국까지, 기간은 다음 날부터 6개월, 대상은 기록취급 우편물이다.

NoteBase

문 9. 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② 국제우편 요금후납은 동일인이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물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

④ 접수된 요금후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자루 체결·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의 취급우체국, 이용 통수, 우편날짜도장 및 발송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두 제도에 공통되는 사항과 요금별납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별납은 같은 사람이 같은 우편물을 한 번에 보내면서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을 별도로 즉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요금후납은 승인을 받은 발송인이 일정 기간의 우편요금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마다 내지 않고 나중에 모아 납부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국제우편 요금별납은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국제 통상우편물은 10통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우편 요금후납은 후납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이용하며, 후납 승인을 받은 한 사람이 통상우편물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해야 한다.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 자체에는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 별도 우편자루 체결·발송 원칙은 요금별납 우편물에 관한 사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요금별납은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을 모두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요금별납은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요금후납은 후납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우편취급국의 요금후납 취급은 등기우편물과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일반우편물로 제한된다.

② X
국제우편 요금후납의 통수 기준은 후납 승인을 받은 한 사람이 통상우편물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이다. 선지의 '매월 10통 이상'은 통수 기준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 이상'
올바른 표현: 후납 승인을 받은 한 사람이 통상우편물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③ O
요금별납 우편물과 요금후납 우편물 자체에는 모두 우편날짜도장 날인을 생략한다. 발송신청서나 접수증 등 관련 서류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는 것과 우편물 자체의 날인을 생략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④ X
별도 우편자루에 체결하여 발송하는 원칙과 물량이 적을 때 단단히 묶어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하는 예외는 요금후납이 아니라 요금별납 우편물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표현: '접수된 요금후납 우편물'
올바른 표현: 접수된 요금별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자루에 체결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량이 적으면 단단히 묶어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10통'은 요금별납 국제 통상우편물의 1회 기준과 섞어 놓은 표현이다. 또한 ④는 요금별납의 발송 방법에서 '별납'을 '후납'으로 바꾼 선지이다. 우편물 자체에는 날짜도장을 생략하지만 관련 서류에는 날짜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별납은 한 번에 보내고 즉시 납부하는 제도, 후납은 승인을 받아 매월 요금을 모아 납부하는 제도로 구분한다. 그다음 별납의 통상우편물 기준은 1회 10통 이상, 후납 기준은 매월 100통 이상으로 대조한다. 날짜도장은 두 제도 모두 우편물 자체에는 생략하며, 별도 우편자루 원칙은 별납에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국제우편은 '별납 1회 10통·취급국 제외·별도 자루, 후납 매월 100통·계약국, 우편물 날짜도장은 둘 다 생략'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우체국 체크카드 월 사용한도는 기본 한도 1억 원, 최대 한도 3억 원이다.

② Biz플러스 체크카드는 신차 구매,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이다.

③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의 교통기능은 일반 카드일 경우에는 선불, 하이브리드 카드일 경우에는 후불 적용된다.

④ 우체국 체크카드는 카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회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의 법인 월 사용한도, 상품별 혜택·교통기능, 카드 효력 상실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크카드의 효력 상실은 해당 카드를 더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회원 본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상품별 혜택과 교통기능은 카드마다 다르므로 다른 카드의 기능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법인의 기본 월 사용한도를 1억 원이라고 한 것이다. 법인의 월 사용한도는 기본 2,000만 원, 최대 3억 원이다.

② X — 신차 구매 등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전통시장·대형마트·주유소·신차 구매·우체국 등 특정 이용처의 캐시백과 해외 결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에 일반형 선불교통과 하이브리드형 후불교통이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라이프플러스 체크카드는 선불·후불 교통기능이 없고 하이브리드형으로 구분되는 상품도 아니다.

④ O — 카드 유효기간 만료, 회원 본인의 사망, 또는 회원 본인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에는 우체국 체크카드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최대 한도 3억 원이 맞아 앞의 기본 한도 1억 원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②는 실제 맞춤형 혜택에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을 섞었고, ③은 다른 일반·하이브리드 카드의 교통기능 구분을 라이프플러스에 옮겨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도 선지는 기본 한도와 최대 한도를 각각 확인하고, 상품 선지는 혜택의 대상·지급 방식·교통기능을 카드명과 연결해 판단한다. 효력 상실 선지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본인 사망,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신고 등록을 묶어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 월 한도는 기본 2,000만 원·최대 3억 원, 라이프플러스는 교통기능 없음, 효력 상실은 만료·사망·후견 신고 등록이다.

NoteBase

문 1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연 면적의 100분의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우체국 예금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도 운용한다.

③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하나이지만, 특별법인 이 법에 의해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전액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

④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시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자금의 법정 운용방법과 한도, 우체국예금·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개인 대출의 허용 여부, 예금보호의 주체,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업무용 부동산 = 영업시설,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과 그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영업시설은 연면적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위탁증거금 =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 시 맡기는 금액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예금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증권의 매매·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 파생상품 거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상 영업시설은 연면적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 비율이 20%인 시설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업무용 부동산의 전체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이내이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다. 대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의 한도는 예금자금 총액의 1.5% 이내이다. 20% 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 취득가액 총액에 적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연면적의 20%를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행령상 업무용 영업시설의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충족한다. 법은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임대를 모두 운용방법으로 허용하므로, 전체 보유한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영업시설로 임대하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② X
-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대한 예탁은 허용되지만, 개인에게 신용대출하는 것은 법 제18조가 정한 예금자금 운용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도 운용한다.
- 올바른 표현: 예금자금은 법이 열거한 금융기관·재정자금 예탁, 증권의 매매·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 파생상품 거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X
-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다.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진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하나이다.
- 올바른 표현: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 및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④ X
-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5% 이내여야 한다. 20%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 틀린 표현: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20% 이내로 한다.
- 올바른 표현: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5% 이내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와 '국가의 지급책임'을 같은 제도로 보는 함정을 둔다.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특별법에 따라 지급을 책임진다. ④는 장내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1.5%와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취득가액 20%를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예금자금 운용 문제에서는 먼저 법이 열거한 운용방법인지 확인한 뒤, 부동산은 직접 사용 비율과 전체 보유한도를, 파생상품은 장내 위탁증거금과 장외 기초자산 한도를 구분한다. 예금보호 문제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인지 국가의 직접 지급책임인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우체국예금은 국가 지급책임, 업무용 영업시설은 직접 사용 10% 이상, 장내 위탁증거금은 1.5% 이내이다.

NoteBase

문 12.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e-Postbank정기예금은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실적, 자동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이다.
ㄷ. 입양자는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 패키지 중 새출발 행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ㄹ.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은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쟁점

우체국 예금상품별 우대금리 조건, 가입대상, 거래제한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상품의 특약에서 우대 요건·가입자격·압류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나 공제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금 대상과 거래가 제한되는 통장이다.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 구분

ㄱ은 틀리다. e-Postbank정기예금의 우대금리 조건에는 가입기간 중 온라인 거치식·적립식 예금 신규 가입, 가입 당시 수시입출식 예금의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이 포함되지만 자동 재예치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은 옳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의 가입대상이다.
ㄷ은 옳다. 입양자는 이웃사랑정기예금의 사랑 나눔 실천자이자 새출발자유적금의 새출발 행복 패키지 가입대상이다.
ㄹ은 틀리다.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되는 하도급대금 관리용 통장이지,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 중 ㄱ이 틀리다. ㄱ의 잘못된 표현은 '자동 재예치 실적에 따라'이다. 올바르게는 e-Postbank정기예금이 온라인 예금상품 신규 가입,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ㄱ에서는 '자동 재예치 실적'을 제외해야 하며, ㄹ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관리용 통장'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행복지킴이통장 가입대상이고, ㄷ의 입양자는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새출발자유적금 새출발 행복 패키지의 가입대상이므로 ㄴ, ㄷ의 조합이 맞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ㄹ의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하도급지킴이통장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출금을 제한하는 하도급대금 관리용 통장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자동이체'와 '자동 재예치'를 비슷한 자동 거래로 묶는 함정이 있다. ㄹ에서는 출금이 시스템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을 법률상 압류금지와 혼동하기 쉽다. 압류방지 기능은 통장 이름이 아니라 보호 대상 수급금과 법적 압류금지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별로 ① 우대금리의 구체적 실적, ② 가입대상, ③ 입금·출금 제한, ④ 법령상 압류금지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특히 '자동이체'와 '자동 재예치', '시스템 출금 제한'과 '압류방지'를 서로 바꾸어 쓴 표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행복지킴이는 수급금 압류방지,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대금 시스템 관리이다. 입양자는 이웃사랑과 새출발 행복의 가입대상이다.

NoteBase

문 13. 주식투자 및 채권투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종자본증권은 대부분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ㄴ.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되며,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채권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ㄷ.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와 주주의 실질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유·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ㄹ. 2021.3.9.(화)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전일종가 75,000원)의 당일 중 최소 호가 단위는 100원이며, 주중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2021.3.11.(목) 개장 시점에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은 출금되고 주식은 입고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구조, 채권가격의 금리·신용·만기 관계, 유상·무상증자의 효과, 주식의 호가단위와 결제일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ㄱ: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통상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자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붙는다. 투자자가 5년 후 상환을 요구하는 풋옵션이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X이다.
ㄴ: 채권가격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하락하고, 발행기관의 신용이 악화되면 하락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잔존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성이 커진다. 따라서 X이다.
ㄷ: 유상증자는 새 자금이 회사로 들어와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재무구조 개선과 타인자본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실질재산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유상·무상증자의 권리락 기준가격은 권리의 가치가 반영되어 조정된다. 따라서 O이다.
ㄹ: 당시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종가 75,000원 주식의 최소 호가단위는 100원이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에 매수한 주식은 휴장일이 없다면 매매일 후 2영업일인 3월 11일 목요일에 결제되어 대금이 출금되고 주식이 입고된다. 따라서 O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틀리다. ㄱ의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풋옵션'은 '발행자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으로, ㄴ의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잔존기간이 길수록 변동성이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옳은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다. ㄱ은 투자자의 풋옵션이 아니라 발행자의 콜옵션이 통상 부여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하므로, ㄱ을 ㄷ으로 바꾼 ㄷ, ㄹ이 옳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ㄴ의 잔존기간 방향을 반대로 고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야 하므로, ㄴ을 ㄹ로 바꾼 ㄷ, ㄹ이 옳다.
④ O — ㄷ은 증자의 재무적 효과와 권리락을 옳게 설명하고, ㄹ은 당시 호가단위와 주식의 2영업일 결제를 옳게 적용한다. 따라서 ㄷ, ㄹ의 조합이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콜옵션의 행사 주체를 투자자로 바꾼 점, ㄴ에서는 만기와 가격변동성의 관계를 반대로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ㄹ은 매수일을 포함해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매매일 다음 영업일부터 2영업일을 세어 결제일을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 콜옵션', 채권가격 변동성은 '잔존기간이 길수록 큼', 증자는 '유상은 외부자금 유입·무상은 자본 내부 대체', 주식 결제는 '매매일 후 2영업일'의 순서로 판단한다. 조합형 문항은 각 문장을 먼저 O/X로 확정한 뒤 옳은 문장만 묶인 선택지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 콜, 채권은 장기일수록 민감, 주식 결제는 당시 T+2이다.

NoteBase

문 14. 보험료를 계산하는 현금흐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적 표준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②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③ 상품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다.

④ 3이원(利原)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적립이율 등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현금흐름방식과 3이원방식의 기초율 적용, 장단점, 경제적·계리적 가정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금흐름방식은 다양한 기초율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목표 수익률을 만족하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회사별 최적가정을 사용하고 기대이익을 별도로 구분하므로 수익성 분석과 사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만, 산출과 기초율 예측이 복잡하다. 반면 3이원방식은 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이라는 세 가격요소에 보수적 표준기초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가격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수적 표준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은 3이원방식에 해당한다. 현금흐름방식은 각 보험회사의 경험과 상품 특성에 맞는 최적가정을 적용하고 기대이익을 별도로 구분한다.

② X —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 부담이 경감된다'는 3이원방식의 장점이다. 현금흐름방식은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므로 산출방법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초율 예측 부담이 크다.

③ O — 현금흐름방식은 미래 현금흐름과 기대이익을 명시적으로 분석하므로 상품개발 단계에서 수익성 분석을 함께 할 수 있고, 개발 후에도 실제 결과와 가정을 비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용이하다.

④ X — '계리적 가정에는 … 적립이율 등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현금흐름방식이 3이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적립이율은 경제적 가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가정에 투자수익률·할인율·적립이율 등이 있고, 계리적 가정에 위험률·해지율·손해율·사업비용 등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현금흐름방식의 특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이원방식의 특징이다. ④는 앞부분이 맞아 보이도록 만든 뒤 적립이율을 계리적 가정에 넣은 것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수적 표준기초율·일괄 적용·산출 간단·예측 부담 경감’은 3이원방식으로, ‘회사별 최적가정·다양한 가격요소·수익성 분석·사후 리스크 관리·복잡한 산출’은 현금흐름방식으로 구분한다. 가정의 분류에서는 금리와 수익률 계열은 경제적 가정, 위험 발생과 계약 유지 및 비용 계열은 계리적 가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3이원은 단순·보수·일괄, 현금흐름은 다양·최적·수익성·리스크 관리이다. 적립이율은 경제적 가정이다.

NoteBase

문 15.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순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피보험자 300명이 단체로 무배당 win-win단체플랜보험 2007에 가입

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을 무배당 우체국통합건강보험 2007에 가입

ㄷ.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007 일반형[1종(갱신형)]에 가입

ㄹ.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단체개인전환·개인중지재개용)(갱신형) 2007에 가입

① ㄱ-ㄹ-ㄴ-ㄷ ② ㄱ-ㄹ-ㄷ-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ㄷ-ㄱ-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입 조건별 우체국보험 보험료 할인율을 비교하여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win-win단체플랜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300명이므로 101명 이상 구간의 할인율 2%가 적용된다.
ㄴ: 우체국통합건강보험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2,500만원이므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의 할인율 1%가 적용된다.
ㄷ: 우리가족암보험 1종의 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이면 보험료 3% 할인이 적용된다.
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할인율은 ㄹ 5% > ㄷ 3% > ㄱ 2% > ㄴ 1%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ㄹ-ㄴ-ㄷ은 2%-5%-1%-3%이므로 높은 순서가 아니다. 틀린 배열은 'ㄱ-ㄹ-ㄴ-ㄷ'이며, 올바른 배열은 'ㄹ-ㄷ-ㄱ-ㄴ'이다.
② X — ㄱ-ㄹ-ㄷ-ㄴ은 2%인 ㄱ을 5%인 ㄹ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배열은 'ㄱ-ㄹ-ㄷ-ㄴ'이며, 올바른 배열은 'ㄹ-ㄷ-ㄱ-ㄴ'이다.
③ X — ㄹ-ㄱ-ㄴ-ㄷ은 1%인 ㄴ을 3%인 ㄷ보다 앞에 두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배열은 'ㄹ-ㄱ-ㄴ-ㄷ'이며, 올바른 배열은 'ㄹ-ㄷ-ㄱ-ㄴ'이다.
④ O — ㄹ 5%, ㄷ 3%, ㄱ 2%, ㄴ 1%의 순서이므로 할인율이 높은 순서인 ㄹ-ㄷ-ㄱ-ㄴ과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단체 가입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ㄱ의 할인율을 가장 높다고 판단하거나, ㄴ의 2,500만원을 할인율 2.5%로 오해하기 쉽다. 할인율은 조건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각 상품의 할인 구간에 대입하여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조건을 해당 상품의 할인 기준에 대입해 할인율을 먼저 적은 뒤 내림차순으로 배열한다. 이 문항에서는 ㄹ 5%, ㄷ 3%, ㄱ 2%, ㄴ 1%로 수치화하면 조합을 바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급권자 5% - B형 간염 항체 3% - 단체 300명 2% - 가입금액 2,500만원 1%이다.

NoteBase

문 16.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07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②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의 경우, 연금 지급구분에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

③ 무배당 우체국요양보험 2007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3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④ 무배당 우체국100세건강보험 2007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을 받은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보험상품별 보험료 산정 기준, 연금 지급형태, 장기요양 보장 등급, 건강증진 혜택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07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의 연금 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다. 무배당 우체국요양보험 2007은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며, 무배당 우체국100세건강보험 2007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으나 나이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② X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의 연금 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다.

③ X
'장기요양 3등급'에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사망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진단이다.

④ O
무배당 우체국100세건강보험 2007은 피보험자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을 받으면 건강관리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성별과 연령의 보험료 차이를 서로 바꿔 놓았고, ②는 다른 연금보험에서 볼 수 있는 상속연금형·더블연금형을 연금저축보험의 지급형태에 섞었다. ③은 장기요양 진단보험금의 특약 범위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 기준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마다 '보험료 산정 기준－연금 지급형태－주계약 보장 등급－부가 혜택'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특히 요양보험은 특약에서 보장할 수 있는 등급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주계약 등급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안전벨트는 성별 차이·나이 동일, 연금저축은 종신·확정, 요양 선지급은 1~2등급, 100세건강은 국민체력100 지원이다.

NoteBase

문 17. 40세인 A씨의 우체국연금저축보험 2007 가입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연금수령 1차년도 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연금 지급구분: 종신연금형
○ 연금수령 개시 나이: 만 55세
○ 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액: 1,200,000원
○ 연금수령한도 초과 연금수령액: 1,000,000원

(단, 납입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액 및 다른 연금소득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적용세율>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나이(만 70세 미만)	종신연금형	
5.5%	4.4%	16.5%

① 96,800원 ② 121,000원
③ 217,800원 ④ 231,000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과 한도 초과 금액을 구분하고, 각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수령 1차년도의 산출세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금 지급구분은 종신연금형이고,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만 55세이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1,200,000원이며, 종신연금형의 연금소득세율 4.4%를 적용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000,000원이며, 기타소득세율 16.5%를 적용한다.
문제의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T=P_한도 이내× 4.4\%+P_한도 초과× 16.5\%
여기서 *T*는 총 산출세액이다. 한도 이내 수령액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 수령액에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한도 이내 수령액의 세액은 1,200,000원 × 4.4% = 52,800원이다.
2. 한도 초과 수령액의 세액은 1,000,000원 × 16.5% = 165,000원이다.
3. 총 산출세액은 52,800원 + 165,000원 = 217,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6,800원은 1,200,000원과 1,000,000원 모두에 4.4%를 적용한 값이다. '한도 초과 금액에도 종신연금형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산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한도 초과 1,000,000원에 16.5%를 적용하여 총 217,800원으로 계산한다.
② X — 121,000원은 전체 수령액 2,200,000원에 만 70세 미만 세율 5.5%를 일괄 적용한 값이다. '전체 금액에 5.5%를 적용한다'는 계산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한도 이내 금액에 종신연금형 세율 4.4%, 한도 초과 금액에 16.5%를 각각 적용하여 217,800원으로 계산한다.
③ O — 한도 이내 1,200,000원에 4.4%를 적용한 52,800원과 한도 초과 1,000,000원에 16.5%를 적용한 165,000원을 합하면 217,800원이므로 옳다.
④ X — 231,000원은 한도 이내 1,200,000원에 5.5%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 1,000,000원에 16.5%를 적용한 값이다. '종신연금형인 한도 이내 금액에 만 70세 미만 세율 5.5%를 적용한다'는 계산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한도 이내 금액에 4.4%를 적용하여 총 217,800원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만 55세라는 조건만 보고 5.5%를 선택하거나, 한도 초과 금액에도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종신연금형 조건에 따라 한도 이내 금액에 4.4%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별도로 16.5%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금수령액을 먼저 한도 이내와 한도 초과로 나눈다. 한도 이내 금액에는 연금의 지급 형태와 수령 나이에 맞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 금액에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두 세액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한도 이내는 해당 연금소득세율, 한도 초과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종신연금형의 한도 이내 세율은 4.4%이다.

NoteBase

문 18. 위험관리와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하며,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② 손해보험 중 특종보험은 상해·화재·항공·보증·장기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으로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동물보험, 유리보험 등이 있다.

③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④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위험)의 조건 중 한정적 측정가능 손실이란 보험회사 또는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위험의 분류 기준, 특종보험의 범위, 동태적 위험의 특징, 보험가능위험의 조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손익의 결과로 구분한다. 순수 위험은 손실 또는 무손실만 가능하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이익·무변화가 모두 가능하다.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위험을 일으키는 환경 변화로 구분한다. 정태적 위험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기고, 동태적 위험은 사회·경제·기술 등의 변화에서 생긴다.

보험가능위험의 조건에서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손실은 손실의 원인·시기·장소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손실이고, 한정적 손실은 보험자나 위험집단의 보상 능력을 넘지 않는 손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분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쓴 설명이다.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사건의 결과가 손실만 가능한지, 이익도 가능한지에 따라 구분한다.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위험이 비교적 고정된 환경에서 생기는지,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생기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틀린 표현인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결과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결과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환경 변화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특종보험의 범위를 잘못 제시하였다. 특종보험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화재보험·해상보험·자동차보험·보증보험·장기보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손해보험을 뜻하며, 건설공사보험·동물보험·유리보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상보험을 특종보험의 예로 든 부분과 상해보험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특종보험에는 건설공사보험·동물보험·유리보험 등이 있고, 해상보험은 제외된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동태적 위험은 사회·경제·기술 등의 변화에서 생기므로 변화의 징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 범위가 넓고 변화 양상이 계속 달라져 과거 자료만으로 발생 확률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④ X — '한정적 손실'과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손실'을 하나의 조건처럼 섞은 부분이 틀렸다. 보험자 또는 위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모의 손실은 한정적 손실을 뜻한다.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손실은 손실의 원인·시기·장소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손실이다. 올바르게는 '한정적 손실이란 보험자 또는 위험집단의 보상 능력 안에 있는 규모의 손실이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위험의 두 분류 기준을 교차하여 바꾸었고, ④는 서로 다른 보험가능위험의 조건인 '한정적 손실'과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손실'을 결합하였다. 용어의 정의뿐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험 분류에서는 먼저 구분 축을 확인한다. 손실과 이익이라는 결과의 축이면 순수·투기적 위험, 사회·경제·기술의 변화라는 원인의 축이면 정태적·동태적 위험이다. 보험가능위험에서는 보상 능력 안의 규모는 한정적 손실, 손실 내용과 금액의 객관적 확정은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손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결과는 순수·투기, 변화는 정태·동태, 보상 능력은 한정적 손실, 객관적 확정은 측정가능 손실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이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은?

A successful team completes its task, maintains good social relations, and promotes its members'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ll three of these factors are important for ① defining team success. To perform effectively, a team requires the right types of people, a task ② what is suitable for teamwork, good internal group processes, and a supportive organizational context. Group members need both an appropriate set of task skills and the interpersonal skills to work as a team. Although teams can perform a wide variety of ③ tasks, appropriate team tasks require that members' work be integ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The group process should maintain good social relations. Finally, the organizational context needs ④ to support the team by promoting cooperation, providing resources, and rewarding succes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치사 뒤 동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명사의 수, 동사 need 뒤의 부정사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며, 선행사가 있는 관계절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쓴다. what은 그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라는 뜻이므로 앞에 별도의 선행사를 둘 수 없다. 또한 a wide variety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고, need 뒤에는 to부정사를 써서 '~할 필요가 있다'를 나타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전치사 for 뒤에는 동명사 defining이 올 수 있다. for defining team success는 '팀의 성공을 정의하는 데'라는 뜻으로 문법에 맞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a task what is suitable for teamwork의 what이다. 앞에 선행사 a task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필요하다. 올바르게는 a task that is suitable for teamwork 또는 a task which is suitable for teamwork이다.
③ O — a wide variety of는 '매우 다양한'이라는 뜻이며, 뒤에 가산명사 복수형 tasks가 온 것은 적절하다. teams can perform의 목적어 역할도 올바르다.
④ O — needs 뒤의 to support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의 to부정사로 적절하다. 주어 the organizational context가 단수이므로 needs도 올바르게 쓰였다.

오답 포인트

②의 what을 단순히 '~하는'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a task처럼 선행사가 이미 있으면 함께 쓸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계대명사 밑줄에서는 먼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선행사가 있으면 that·which·who 등을 검토하고, 선행사가 없이 '~하는 것' 전체가 필요할 때 what을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that과 which는 앞의 선행사를 받는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on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formal emails and rate them based on warmth and competence. Some of the messages contained a smiley face. The results showed users who sent formal emails with smiley faces only saw a small rating ___(A)___ in warmth, but a decline in competence. Although smiley faces may help convey a positive tone in written messages, their ___(B)___ effects on first impressions of competence may outweigh these benefits. A separate experiment had participants read an email from a new employee to an unfamiliar administrative assistant. One was about a business meeting, while another was related to a social gathering. The study found participants rated the formal messages with smiley faces lower in competence than the emails with just text. In the case of the informal messages, competence ratings were about the same.

	(A)	(B)
①	decrease	positive
②	decrease	adverse
③	increase	positive
④	increase	advers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험 결과의 증감 관계와 문장 속 대조·인과 표현을 근거로 increase와 adverse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ncrease는 수치나 정도의 증가를 뜻하고, decrease는 감소를 뜻한다. adverse는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뜻하고, positive는 긍정적인 영향을 뜻한다. 본문은 스마일 표시가 따뜻함 평점에는 작은 증가를 가져왔지만 능력 평가는 떨어뜨렸다고 대조한다. 따라서 (A)는 increase, (B)는 adverse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의 decrease와 (B)의 positive가 모두 문맥에 맞지 않는다. 따뜻함 평점은 소폭 증가했고 능력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므로, decrease는 increase로, positive는 adverse로 고쳐야 한다.
② X — (B)의 adverse는 맞지만 (A)의 decrease가 틀리다. 따뜻함 평점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소폭 증가했으므로 decrease를 increase로 고쳐야 한다.
③ X — (A)의 increase는 맞지만 (B)의 positive가 틀리다. 스마일 표시가 능력 평가를 낮춘 결과를 가리키므로 positive를 adverse로 고쳐야 한다.
④ O — increase를 넣으면 따뜻함 평점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adverse를 넣으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따뜻함의 이점보다 클 수 있다는 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스마일 표시가 positive tone을 전달한다는 표현만 보고 (B)를 positive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B)는 스마일 표시의 분위기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첫인상에 미친 효과를 수식하며, 본문은 그 능력 평가가 하락했다고 밝힌다. 또한 but 뒤의 a decline in competence와 대조되는 앞부분은 warmth의 increase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의 단어만 보지 않고 실험 결과를 직접 진술한 문장을 찾는다. 증감 표현은 수치의 방향과 맞추고, 효과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그 효과의 대상과 실제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맞춘다.

암기 포인트

warmth는 small increase, competence는 decline이므로 competence에 대한 효과는 adverse이다.

NoteBase